

## 공중위생업자 직권 말소시 청문절차 폐지

# 05



### 개선배경

관할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도 폐업에 대한 공중위생업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불필요한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 필요

### 개선내용



####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청문절차가 필요한가요?

##### 개선 전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는 경우 청문절차 실시

##### 개선 후

공중위생업자 폐업신고 직권말소 시 청문절차 생략

▶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12조 제1호 개정 추진 중(20년 하반기 발의 예정)

### 개선효과

-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직권말소 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불필요한 청문절차 생략으로 시민 불편 해소

## 소방시설 자체점검 원스톱서비스

# 06

### 개선배경

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방안전관리 비용 부담 호소 및 전문대행업체 없이 직접 점검 증가로 영세건축물 안전관리 및 점검부실 우려

### 개선내용



#### 소방시설점검 직접할 수 있나요?

##### 개선 전

전문대행업체 위탁 또는 직접점검

##### 개선 후

중부소방서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도움 원스톱서비스로 더욱 안전한 점검지원  
»

- ▶ 울산 중부소방서 「소방시설 자체점검 도움서비스」운영 : 2020.4.1.~12.31.  
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한함. 소방시설·부품 무상수리 지원서비스 병행 실시

### 개선효과

- 기술·장비·인력지원으로 소방시설관리방법 전수로 자율점검체계 강화
- 영세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비용(약 66만원) 부담 경감
- 원스톱서비스 시행시 화재안전 정보조사 병행 및 표본점검 제외로 유사 목적 행정 수행으로 부담 최소화

## 드론과 공간정보를 활용한 열지도 제작

# 07



### 개선배경

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폭염발생이 예상되나 열분포에 대한 시각적인 데이터 부재로 폭염에 대비한 정책수립의 과학적 의사결정 자료 필요

### 개선내용



#### 폭염대책을 과학적으로 할 수 없나요?

##### 개선 전

열분포에 대한 시각적인 데이터 부재

##### 개선 후

열화상센서를 장착한 드론과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열분포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중구 열지도 제작

- ▶ 열화상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여 지표면의 온도 촬영
- ▶ 드론촬영 불가지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위성영상 지표면 온도 확보

### 개선효과

- 열지도와 인구, 건물, 도시계획 등 행정데이터를 융합하여 폭염대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
- 폭염대책 수립 시 담당자의 예측에 의한 정책수립 한계를 탈피하여 효율적인 폭염대책 수립 가능

## 폐원어린이집, ‘다함께 돌봄센터’로 탈바꿈

# 08



### 개선배경

2020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결과 약 1,100명의 아동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‘다함께 돌봄센터’ 추가 설치가 필요하나, 장소확보 곤란 및 신·증축의 경우 과도한 시설비 부담이 증가 되는 한편, 저출산·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등으로 폐원어린이집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디어 제시



### 개선내용



### 폐원어린이집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이용하면 어때요?

#### 개선 전

민간어린이집과 ‘다함께 돌봄센터’의 시설 운영 자격이 상이하어 민간어린이집 원장(개인)은 운영자격이 없음.

#### 개선 후

사회적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 추진으로  
설치 요건(운영자격) 구비

- ▶ 폐원어린이집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협약(19.12.26.) 및 이진·달동·삼산 다함께 돌봄센터 위수탁 협약(20.2.6.)



### 개선효과

- 2020년 6월부터 7~80명의 아동에게 정기·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



## 자가격리자 자력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체 채취

# 09



### 개선배경

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입국 등으로 자가격리된 자가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 시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 시 추가 접촉자 발생 및 지역사회 감염 우려



### 개선내용



**코로나19 선별진료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불안해요!**

#### 개선 전

선별진료소까지 개별 이동

#### 개선 후

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자가격리자 거주지로  
» 직접 방문하여 검체 채취

- ▶ 「의료법」 제33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
- ▶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자가격리자 외출 방지 위해 「찾아가는 검체 채취팀」 구성·이동 검체 채취 실시



### 개선효과

- 찾아가는 검체 채취로 채취한 88명 중 6명이 확진판정(남구확진자의 33%),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자의 지역사회 감염 선제 방어
- 지역사회 감염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 가능

## 선거협업 온라인지도 구축

# 10



### 개선배경

신속·정확하고 효율적인 선거업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업무 체계가 구축·유지 필요하나 기존의 수작업을 통한 공간정보 처리로는 많은 문제점 발생



### 개선내용



### 효율적인 선거 온라인 지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?

#### 개선 전

선거관련현황 지도시스템 전무로  
투표구 조정, 확인 등 종이도면으로  
수작업 처리

#### 개선 후

» 공간정보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 
선거 온라인지도 구축

▶ 별도의 구축비 없이 기존의 「공간정보Dream」을 이용, 토지정보과, 선거담당부서, 행정 복지센터,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도면, 엑셀, 한글 데이터를 자체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맞춤형 제작(2019년 11월 ~ 2020년 4월)



### 개선효과

-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선거업무 개선을 시도한 전국 최초 협업 사례
- 울산 남구의 전체 투표구 현황, 투표소 위치, 선거벽보위치 확인, 통별 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 가능하여 신속한 투표구 오류 수정 및 민원 안내 가능

## 법을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건강지원

# 11



### 개선배경

산업안전 보건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존재

### 개선내용



####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검진도 필요합니다!

##### 개선 전

최소한의 일반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 
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, 특수고용노동자는  
민간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건강지원

»

##### 개선 후

50인 미만 사업장, 아파트 청소·경비,  
버스·화물운전, 시트봉제, 학교 급식소  
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에 건강검진 서비스  
제공

▶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2020.7.2.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)



### 개선효과

-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제도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, 건강증진위원회 구성 의무화
- 노사민정을 연계한 취약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협업으로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구축

# 규제신문고 경제·민생 현장 10大 규제혁신 사례

※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국무조정실 소관 규제개혁신문고([sinmungo.go.kr](http://sinmungo.go.kr))에 접수된 1,380건의 국민 건의 중 개선된 238건 중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사례임.



# [ 1

##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류규제 폐지 - 기대부

# ]

### 기 존

주류\*는 음주에 따른 국민보건 및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상품의 제조·유통·판매·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

- 미림 등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 → 일반 주류와 동일한 규제\*\* 일괄 적용

\*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 등으로 주세(출고가10%) 및 교육세(주세액 10%) 과세대상

\*\* 제조시 면허취득 및 시설요건, 주류도매업자가 전용차량을 통한 주류 유통, 온라인(통신) 판매금지 및 미성년자 구매불가 등



◇ (제조사) 기존 조미용 주류제품의 가격인하 및 1도 이상의 다양한 조미용 주류 제품개발에 애로가 발생하는 만큼 규제외 건의

◇ (자영업) 식당 등에서 식자재를 납품 받을 때 조미용 주류도 유사 조미료와 함께 납품받도록 개선 건의(별도 구매에 따른 불편 해소)

◇ (소비자) 다른 식품과 동일하게 인터넷을 통한 구매 허용 건의(오프라인 대면구매에 따른 쇼핑불편 해소)

### 개 선

음주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없는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류 범위에서 제외 (주류규제 폐지) \* 「주세법」개정('20.12월)

◀ 조미용 주류제품의 가격인하 및 다양한 관련상품 출시가 가능해지고, 음식점 등 자영업자·일반 소비자의 조미용 주류 구매 불편 해소 기대

## [ 2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개선 -행안부 ]

### 기 존

방문 전입신고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 후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

- 「정부24」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'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대부분 전입신고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·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국민불편 가중



### 개 선

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(新거주지 주민센터→전국 주민센터)

\* 「주민등록법」개정('21.11월)

☞ 노인·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행정 편의성 제고

※ 전입신고 형태('19년) : 온라인 1,256,381건(21%), 주민센터 방문 4,682,728건(79%)

# 3 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적 투자심사절차 일원화 - 교육부·행안부

## 기 존

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\* 포함된 학교 신·증축시 이중적 「타당성 조사」 및 「투자심사」 절차 의무화

**\* 학교복합화시설** : 학교시설(교실, 체육관 등)과 주민시설(평생교육시설 등)을 포함한 복합시설

-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각각의 타당성조사\*를 거쳐,
  - \* 조사대상 및 외부전문기관: 500억 ↑ △ 교육부(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) △ 행안부(한국지방행정연구원)
-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\* 각각 실시
  - \* 심사대상: △(교육부) 300억 ↑ △(행안부) 광역 300억 ↑ (기초 200억 ↑)

## 현/장/사/례



수원시·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을 포함한 초·중학교 건립(총사업비 약 700억)을 추진 중이나, 부처들의 중복적인 타당성 조사·중앙투자심사 절차\*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개교 시기가 최대 1년 이상 지연 불가피(→ 집단민원 발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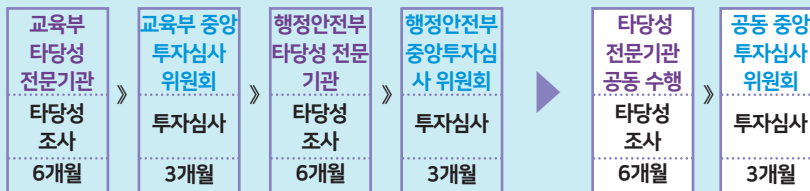
## 개 선

교육재정과 지방재정 함께 투입되는 해당 시설대상 부처의 중복적 타당성 조사·투자심사 절차 일원화(각각 실시(2회) → 통합 실시(1회))

\*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」 개정(교육부, '20.5월, 완료)

「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」 개정(행안부, '20.4월, 완료)

## 【공동투자사업 관련 중앙투자심사 개선사항】



☞ 학교복합화시설을 포함한 학교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 예산 절감 기대(← 중복적·이중적 행정절차 규제 해소)

## 4 비영업용(자가용) 캠핑카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- 국토부

### 기 존

자가용 승용차·승합차·화물차(2.5톤 미만)는 차고지 의무가 없으나,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'특수자동차'로 분류 → 차고지 의무 발생

- 자가용 화물차(2.5톤 이상), '영업용차', '특수 자동차\*' 등 대상 원칙적으로 차고지 확보 의무화(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목적)

\* ① 견인용 ② 구난용 ③ 기타 특수용도형(캠핑카 포함)으로 구분

- 차고지 확보의무 대상차량은 신규등록·변경·이전등록시 차고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

### 현/장/사/례

(캠핑카 튜닝 SUV 차주) 소유한 SUV를 가족과의 캠핑용으로 일부 튜닝 후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존 평상시 주차가 가능했던 거주 아파트 주차장 이외에 별도의 차고지 확보규제를 확인하고, 변경등록에 애로 호소



캠핑용 승용차



캠핑용 승합차



캠핑용 화물차(2.5톤 ↓)

### 개 선

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(승용차·승합차·화물차(2.5톤 미만))대상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(다만, 튜닝후 총중량 기준 3.5톤 이하인 차량 대상)

\* 「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」 개정('20.10월, 완료)

▶ 튜닝한 자가용 캠핑카 차량소유주의 불편해소 및 국민 캠핑수요에 부응한 캠핑카 튜닝·이용 활성화 기대



## [ 5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전자 투표 도입 - 국토부 ]

### 기 존

도시정비사업(재개발·재건축 등)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①현장투표 ②서면투표 ③대리인투표 방식만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면서, 조합원의 일정비율\* 직접출석 의무화

\* 일반사항 10% ↑ (창립총회·관리처분계획 등 주요사항 20% ↑)

### 현/장/사/례

(재건축 조합)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 관련 불가피한 일정으로 '드라이브 스루' 형태 재건축 조합 총회를 개최(4.28), 관리처분계획변경 등 주요 안건을 처리  
(← 전자투표 방식 불인정 및 조합원 20% ↑ 직접출석 의무규제)



### 개 선

총 회 의결방식에 기존방식(①~③) 외 '전자투표 방식' 도입 및 조합원의 일정 비율 직접출석 의무규제 폐지

\* 「도시정비법」개정('21.6월)

① 조합총회 의결권 확보와 조합원 참여가 용이해지고, 비대면 통한 코로나19 감염증 지역확산 예방효과 기대

## [ 6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 - 교육부 ]

### 기 존

읍·면·동의 장은 입학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관내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 필요

- 다른 고지서와 달리 취학통지서는 통장 통한 인편 또는 등기로만 발급 → 보호자와 아동의 거주지가 다른 조부모 가정 등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국민 불편 초래



### 개 선

지자체가 취학통지서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온라인 방법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추진(인편 또는 등기+온라인 발급·통지)

\* 「지자체 및 시·도교육청 대상 통지방법 확대」 행정조치 추진('21.11월)

☞ 기술발달과 생활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맞춤형 다양한 행정 편의제공 확대

※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규모('20년) : 약 45만명

# [ 7 ]

##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 범위 확대 - 교육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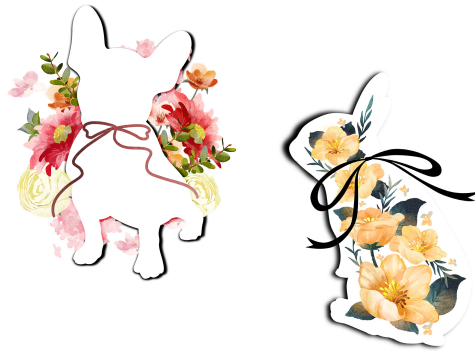
# ]

### 기 존

반려동물이 죽어서 허가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'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\*'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

- 반려동물 수요 등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으나,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이외에는 동물장묘시설 이용 불가

\* 개 · 고양이 · 토끼 · 페럿 · 기니피그 · 햄스터(총 6종)



### 개 선

동물장묘시설 이용대상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추진(다만, 멸종위기종 또는 야생 동물 등은 제한)

\* 「동물보호법」개정('21.6월)

☞ 국내 반려문화 성숙에 따라 높아진 반려동물 사후처리 관련 동물장묘이용시설 수요에 대응

## [ 8 ] **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** - 환경부 ]

### 기 존

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(집단급식소, 대형음식점 등)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시 위탁처리 의무화(종량제 봉투 직접배출 금지)

\* 다량배출사업장 :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직접 위탁처리(처리 복잡)  
그 외 사업장 :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배출(처리 간편)

-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여부는 영업장 면적기준(200㎡ ↑) → 커피전문점 등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사례 발생(불합리한 기준 규제)



### 개 선

실제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(커피전문점, 아이스크림 전문점)의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제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(사업장 면적 →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)

\*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개정('21.12월)

☞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

# [ 9

##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제한 - 새만금청

# ]

### 기 존

새만금산업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위해 사용 가능한 발전시설로 '태양광 에너지' 발전시설만 허용



### 개 선

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태양광 이외에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(수소연료전지, 풍력 등) 설치가 허용되도록 개선

\* 「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」변경('21.6월)

☞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새만금산단 활성화 기여

# [ 10 ] 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·발신기 ‘전화단자’ 설치기준’ 폐지 - 교육부 ]

## 기 존

대부분의 4층 이상 건물·시설에는  
자동화재탐지설비에  
‘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 
(전화단자)’  
설치가 의무화(화재시 전화통화 목적)



<자동화재탐지설비 수·발신기(전화단자 O)>

- 핸드폰 등 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더 이상 사용빈도도 낮고, 불필요한 선로공사와 유지보수가 필요 → 낡은 설비규제가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



## 개 선

통신기술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유지·관리상 불필요한 ‘전화단자 설치기준’ 폐지

\* 「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」개정(’21.7월)

☞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작·설치비용 감소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 기대

# 규제개혁 제도 및 불합리한 규제신고



# 규제개혁 제도

1

## 규제입증 책임제

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국민·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,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·완화

2

##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

신제품·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'우선 허용'하고 필요시 '사후 규제'하는 방식의 유연한 규제체계로 전환 ※ 2018년 3월 도입  
↔ 포지티브 규제(허용대상을 한정 열거하고 경직적인 법령체계)

3

## 규제 샌드박스

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(기간·장소·규모)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·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·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
※ 2019년 1월부터 운영

4

## 중소기업 옴부즈만

불합리한 중소·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사항을 상시적·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(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)으로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  
※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운영 ([www.osmb.go.kr](http://www.osmb.go.kr))







## 불합리한 규제신고



### 온라인(인터넷)

- 규제정보포털([www.better.go.kr](http://www.better.go.kr))
- 규제개혁신문고([www.sinmungo.go.kr](http://www.sinmungo.go.kr))
- 중소기업 옴부즈만 ([www.osmb.go.kr](http://www.osmb.go.kr))



### 오프라인(방문·전화)

-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“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”
  - 방문 : 울산광역시청 본관 5층 법무통계담당관
  - 전화 : 052-229-6791~2
  - 팩스 : 052-229-2279
- 구·군 규제개혁 담당부서
  - 중 구 기획예산실 : 052-290-3092
  - 남 구 기획예산과 : 052-226-5344
  - 동 구 기획예산실 : 052-209-3053
  - 북 구 기획예산담당관 : 052-241-7132
  - 울주군 기획예산실 : 052-204-0154

2020년 울산광역시  
**규제개선  
사 례 집**

발행일 | 2020년 12월

발행처 | 울산광역시

디자인·인쇄 | 주식회사디자인인(T.010-6630-2497)